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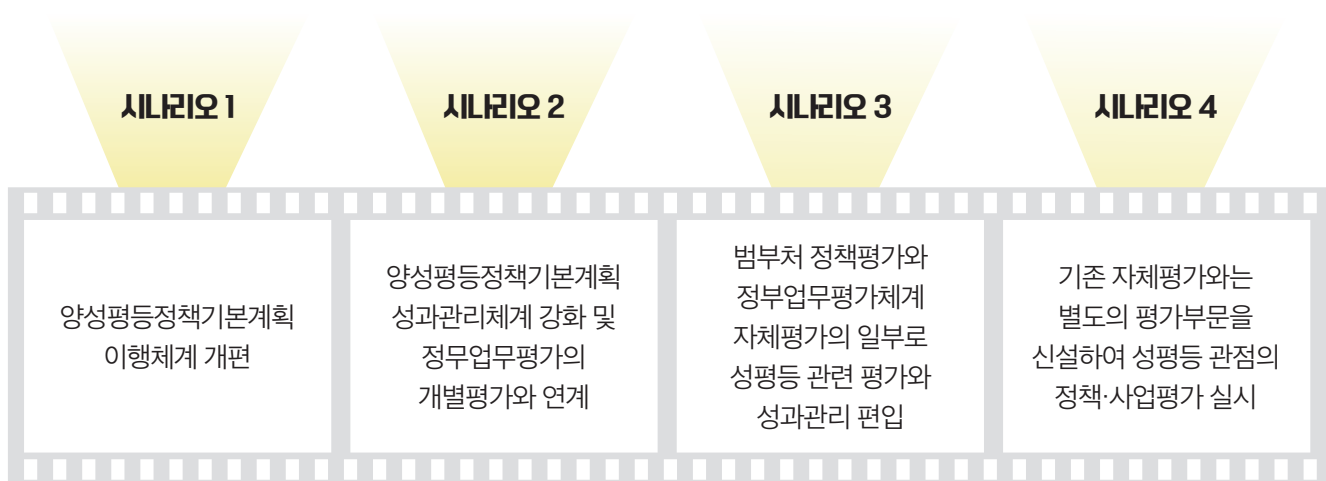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모형 연구(Ⅰ): 다층적 연계모형의 확립
과제책임자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실질적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제도연계 방안

초록

- ◆ 10년이 훨씬 지난 시간 동안 범정부적 성주류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추진되어 왔지만, 각각의 제도들이 시행주체와 근거법령 등 별도의 제도적·조직적 테두리 내에서 개별 제도의 자체 완결성만을 추구하며 발전해오다 보니 성주류화 추진 제도들 간의 내부적 연계, 성주류화 추진 제도들의 외적 조건과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반적 정책·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성주류화 추진의 정부 수준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기능 분화 등이 등한시되어 왔음.
- ◆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제도내 연계, 제도간 연계, 정부수준간 연계라는 3가지 차원의 연계를 구현하는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나아가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 관점의 성주류화를 위해 4가지 제도개선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이들 중 3개 시나리오에 대해 필요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제안하였음.
- ◆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는 공적 가치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자원을 동원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전략과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의무가 있음. 이 연구의 제도개선 시나리오와 정책 제안은 정부가 그러한 의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성주류화 제도 연계시나리오



배경 및 문제점

- 성주류화 전략의 발달과 전개와 더불어 핵심 성주류화 실행도구들(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은 각자 독자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개선해옴에 따라 이 세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그동안 대표적 성주류화 도구로서 각자 독자적 법률, 독자적 추진 체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으나, 효과적 성주류화를 위해서 각 도구들 간의 연계와 시너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다른 정책·사업 평가제도(기획재정부의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및 행정안전부의 정부업무평가제도, 각 부처별 범부처 기본계획 평가체계 등)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두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일반적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들과의 양립 가능성도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두 제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적용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사업 추진체계를 무시한 천편일률적 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효과적인 사업 연계와 재정 연계를 염두에 둔 제도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달성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성인지통계가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시행 및 체계적 성인지통계 활용을 통해 각 정부 소관 별로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사업기획·예산편성·사업시행 및 성과관리·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통합적 성주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제도들 간의 내적 연계, 성주류화 제도와 타 정책평가제도들 간의 외적 연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부간 연계가 각각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필요조건과 성공요인을 발굴 하는 연구가 필요함.

조사 및 분석결과

-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타 기본계획의 비교 : 사후평가 체계 미비
 -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각종 범부처 기본계획들을 살펴보고 세부과제의 선정 과정, 추진실적 평가 규정 등에 초점을 맞춰 각 기본계획 체계를 비교분석함.
 -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장기 성평등 전략계획으로 기능하기에는 기본계획의 이행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성과관리에 반영할 법적 근거와 내용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함.
 - ▶ 유사한 사회보장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직업훈련촉진기본계획 등과 비교해 본 결과, 추진실적 평가 및 성과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계획 세부과제의 선정이 너무 지엽적이며 관련 성과지표도 잘 갖추어지지 못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그것을 기본계획 상 대과제 이행실적 평가와 연결시키기 어려움.

2. 성별영향평가제도, 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통계 간 연계 미흡

- ▶ 사업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은 전략목표 체계를 갖지 않고 개별적 미시적 사업 평가에 치중된 경향이 있으며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성인지예산제도는 소관 법률과 담당 부처가 다른 관계로 성별영향평가와 효과적인 연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기계적 연계만 이루어지고 있음).
- ▶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중장기 성평등 전략목표가 개별 사업 수준(혹은 정책과제 수준)의 정부활동에 의해 제대로 뒷받침되고 달성 정도가 평가될 수 있도록 두 제도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두 제도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분석을 수행하고 유사한 형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기 다른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음.
- ▶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라는 전략목표를 관리한다는 동일한 목적에 복무하면서도 관리의 방식과 대상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편될 필요가 있음.

3. 정부업무평가 및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와 유리

-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추진체계, 운영실태 등을 분석함.
- ▶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체계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이나 업무추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제로서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등이 있는데, 이들 하위 평가체계들 어디에도 성평등 관점의 평가와 성과관리가 반영되거나 편입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 개별평가에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평가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나 사업성별영향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국가위임사무 등을 평가하는 합동평가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지표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와 성인지예산제도 역시 완전히 분리돼 있음. 전자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에는 비록 동일한 단위사업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일지라도 성인지예·결산서 상의 정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그 반대로 마찬가지임.
- ▶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 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의 대상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국가재정법 제 85조의8 제2항) 성과계획서의 작성 양식도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를 지향하도록(단위사업 수준의 성과관리 지양) 개편됨에 따라, 향후 이 분리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이처럼 두 평가·성과관리 주무부처의 성과관리체계와 동떨어져 실시되는 성평등 관점의 평가와 성과관리는 구속력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평가 담당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따라서 평가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 또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의한 두 평가제도는 전략목표에서 개별 성과목표에 이르는 전략목표체계가 확립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정책과제가 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목표지향적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사업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은 성평등 관점의 전략목표 체계가 부재한(혹은 사후적으로 첨부된) 상황이며 따라서 성평등 성과관리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및 평가체계 정비 필요

- ▶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 및 절차, 지방재정관리제도 내용 및 특성, 재정사업 유형 및 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중앙 및 지방간 사회복지재정 관계 등 분석. 지방정부의 예산과정과 재정관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각각의 과정에 성인지예산 및 성주류화 조치가 개입할 가능성을 탐색함.
- ▶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크게 재량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성평등 관련성이 큰(따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들은 대부분 기획은 중앙행정기관이 하고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며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와 지방정부의 매칭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물량에 대한 추정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할 재량만 있고, 사업수혜자의 범위, 사업의 목표, 사업수행방식 등에 대한 재량 변경과 개선을 주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임.
-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존치평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 등 각종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복수의 중앙행정기관 보조사업의 실행이 집중되는 기초자치단체 사업부서에서는 각종 평가 대응 업무만으로도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음.
- ▶ 이런 상황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재량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입장에서는 업무의 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재량과 자율을 행사할 여지가 매우 제한된 영역에 대해 사업개선과 성과 제고의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5. 제도 연계를 위한 방안의 모색

- ▶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실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성주류화제도 및 정부 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분야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 ▶ 설문조사 결과,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이 기계적이고 피상적이다”,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시너지를 내지 못한다”, “성과관리가 개별 대상 사업에만 치중되어 부처(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에 각각 60%가 넘는 응답자가 동의하여 이들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남.
- ▶ “현행 성별영향평가법령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총괄조정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문한 결과, “현행대로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부 추진의 주요사업, 정책평가, 정책총괄조정을 맡은 중앙행정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9.7%로서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임.

- ▶ 또한 “성별영향평가제도나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여타 정부사업 평가 제도(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제도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에 대해 74.8%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음. “유기적 연계”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내에서 재정사업성과평가 담당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와 유사절차, 추진체계로 기획재정부 외 타 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 등)이 수행(25.8%)”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에서 정부업무평가 담당조직에 의해 운영(24.5%)”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뒤따름.
- ▶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관련 전략목표를 수립한 다음,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를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별하여 성과관리하는 방식으로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라는 진술에 대한 찬반 정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5%(동의하는 편이다+전적으로 동의한다)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성평등 관련한 전체 기관 차원의 전략목표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한 결과, “자체 역량으로는 부족하지만 외부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평가한 비중이 66.9%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기관의 자체 역량으로 대체로 가능하다(15.9%)”, “기관의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설정 가능하다(9.3%)”는 응답이 뒤따름.
- ▶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체계 중에서 특정평가의 일부로 성평등 관점의 성과관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임. 특정평가의 운영방식이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여 부처의 각 사업(주요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는 맞지 않고, 주요 정책이 아니라 정부혁신·적극행정 등 다른 영역에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평가지표들이 성평등이라는 포괄적 주제와 다르게 매우 특수하고 특정 이슈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임.
- ▶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성과목표관리체계 혹은 재정사업성과평가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문한 결과, 성평등 추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별도 예산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재정사업에 대해 성평등 관점의 영향을 평가한다는 것인데 그런 목적의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는 여성가족부를 제쳐두고 재정사업 평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평가를 기획재정부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됨.
- ▶ 한편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정부업무평가의 개별 평가와 연동하자는 제안도 있었음.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사후평가를 개별평가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조건들도 제시됨.
- ▶ 기존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체계 안에 성평등 관점의 평가요소를 포섭하는 것, 즉 전략계획에 성평등과 관련한 환경 분석을 포함시키고 성평등 개선과 관련한 전략목표를 추가하며 그에 따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들을 추가해서 기존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고보조 사업이나 시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량사업에 대해서만 자체 성평등 성과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재정자주도가 높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재량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 이러한 계량적, 정성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서 문헌 검토를 통해 확인된 세 가지 층위별 연계를 위한 쟁점들을 해결할 방안으로서 네 가지 제도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함.
- ▶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이행체계를 개편하여 허술한 사후평가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임.
 - 먼저 평가 및 성과관리 절차를 양성평등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립하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주요 영역별로 심도 있는 성분석을 통해 계획기간 동안 달성할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그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함. 이것을 바탕으로 개별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동안 연간으로 성과를 추적 감독해야 할 관리과제(세부과제)를 선정. 관리과제의 성격에 따라 사업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자동 선정하여 평가·관리함.
 -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업 성별영향평가서나 성인지결산서를 토대로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와 상위 목표들의 달성여부를 개별 부처가 자체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한 후, 개별 부처에 개선사항과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전달함.
 -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함. 각 자치단체의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수립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과제를 선정함.
 - 기초자치단체는 별도 시행계획 수립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소관 사업들 중 관리과제를 선정함.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량사업 중에서 관리과제를 선정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사업이나 법정 의무 지출 사업 등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및 성과집계를 요청할 수는 있음.
- ▶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행체계의 강화가 이루어진 이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이행 실적 평가를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체계의 개별평가에 연계하여 평가의 구속력과 성과관리 실효성을 더 높이는 방안임.
 -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개별평가의 하나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시나리오 1에 의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평가 및 성과관리가 안정화되고 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할 것임.
 - 이를 토대로 여성가족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요건을 갖추어 개별평가 실시를 신청하고 위원회 협의를 거쳐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실시계획을 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고 평가를 시행하게 됨.
 - 평가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개별평가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관리평가함. 개별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음.
 - 다만 개별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평가로서 국고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에 정향된 평가로 경도되기 쉬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성평등 성과관리를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개별평가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세 번째 시나리오는 범부처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체계 자체평가의 일부로 성평등 관련 평가와 성과관리를 편입시키는 방안임.
- 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통합·추진하고 개별평가의 남설을 지양한다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기도 함.
-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을 받아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시 성평등 관점의 전략목표체계 수립을 위한 지침도 포함시켜서 지침을 마련함. 이 지침에 입각하여 개별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성평등 관련한 목표를 목표체계 안에 포함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함.
- 중앙행정기관은 이 전략계획에 입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과제를 선정함. 이들 관리과제 중 성평등 전략목표에 복무하는 관리과제들은 (일반재정 및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성인지예산과정 및 여성가족부의 사업 성별영향평가 과정(여타 정책과제의 경우에는)에 의해 그 추진실적과 성과가 집계되고 해당부처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성평등 관점이 포함된 전략 목표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평위에 제출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국무회의 보고 이후 그 결과는 부처로 피드백됨. 부처는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시행계획 혹은 예산안 편성에 활용하고 자체 인센티브 기제를 통해 보상과 패널티를 제공함.
- ▶ 마지막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자체평가 부문(주요정책, 재정사업 중 일반재정·국가연구개발·재난안전·균형발전, 행정관리역량 중 조직·인사·정보화)과는 별도의 평가부문을 신설하여 성평등 관점의 정책·사업평가를 실시하는 것임.
-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사업들과 정책과제들을 하나의 전략계획 체계 안에 총괄하여 자체평가 하는 것으로서 주관기관은 여성가족부가 됨.
- 기존에 자체평가 부문 별로 시행령상에 지정돼 있던 주관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균형발전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이외에 성평등 자체평가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임.
-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여성가족부 및 국무조정실의 대규모 조직개편 및 보강이 필요하고 주무부처가 성평등 관련 예산편성권 까지 보유한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어야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실현가능성이 낮음.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 광역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 기획예산·평가 담당부서